

한반도 통일의 인류 보편적 가치: 편익(便益) 위주의 담론을 넘어서†

김재천*

<국문요약>

그 동안 한국의 학계에서는 한반도통일의 가치를 주로 안보적 또는 경제적 편익(便益)의 관점에서 논의해 온 경향이 있다. 인문학적 통일담론은 안보적·경제적 편익 관점의 한반도통일 가치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韓)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분단 트라우마(truma) 치유 등에 천착하며 한반도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춘 통일가치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반도통일은 한민족에게 안보위협의 제거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이를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 public goods)”의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로 인해 발생할 긍정적 효과를 수혜할 대상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로, 그리고 국제사회로 확장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은 국제분쟁과 화해의 역사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공할 것이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고질적인 분쟁도 해결될 수 있고 따뜻한 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이벤트로 세계사에 기록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통일은 비확산의 규범과 국제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여를 하게 된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국제 거버넌스에도 일정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한반도 “행복공동체”를 건설한다면 한계에 봉착한 듯해 보이는 자유주의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통일의 국제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담론 형성은 대한민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합의 도출에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주제어] 한반도통일, 통일의 가치, 국제공공재, 국제분쟁, 국제 거버넌스

* 김재천(E-mail:jaechun@sogang.ac.kr)
학위취득대학: 예일대학교 정치학박사
현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이 논문은 2016년도 경제사회인문 연구회 인문정책 연구 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논문접수일: 2017년 4월 3일, 논문수정일: 2017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7년 8월 16일

한반도 통일의 인류 보편적 가치: 편익(便益) 위주의 담론을 넘어서 97

Korean Unification and Global Public Goods

Kim, Jae-chun

<Abstract>

Much of the discussion on Korean Unification and its values have revolved around economic and security benefits that unification would bring to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paper claims that the benefits of the Korean Unification would go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y would exte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Korean Unification would be a world historical event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re specifically, the Korean Unification can contribute to many issue areas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non-proliferation, human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human trafficking, and money laundering.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one of the world's major zones of conflict. By resolving the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can impart a positive message to the world that seemingly intractable conflicts can be resolved if we put in good faith efforts. Success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means that two very different societies – one that is quite rich and the other, very poor – can be integrated into one society with proper policies. The Korean Unification can work as a model for solving polarization of incomes and inequalities associated with the unfettered advance of Globalization. Emphasizing the nature of the Korean Unification as international public goods would enhance our public diplomacy efforts to elicit international support for a policy of Korean unification.

[KeyWords] *Korean Unification, Benefits of Unification, International Public Goods, International Conflicts, Global Governance*

I. 들어가는 말

북한은 2016년에만 핵실험을 두 차례 감행하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도 수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핵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해결책까지 언급하고 있다. 분단 70년이 지난 한반도에 통일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국전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반도를 영위하고 있는 한(韓)민족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그리고 한민족에게 발생할 통일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주변 국가들은 통일에 그다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반도통일은 역내 지정학적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에 주변국들은 현상유지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국제사회 역시 통일을 한반도의 국지적인 사안으로만 인식해 왔다. 한반도통일의 국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의 가치에 대한 국내 중심적, 그리고 안보·경제편익 중심적 담론을 비판한다. 통일의 가치를 지정학적 경성권력의 증감(增減)이나 경제적인 편익(便益)의 관점에서만 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또한 편익위주 담론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 인문학적 관점의 통일담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반도 중심으로 전개된 인문학 통일담론의 한계 역시 지적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 영역에 통일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의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공공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논문의 주장은 과학적 증거로 입증하기 보다는 개념을 재정립하는 수준으로 개진할 것이다.

II. 통일대박론과 통일담론

박근혜 전대통령이 2014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통일 대박론”을 설파한 이후 한국 사회에서 그 동안 동력을 잃고 사그라져 가고 있던 통일담론이 재점화(再點火) 되었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4년 7월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통일 대박론이 제기된 후 관계와 학계뿐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한반도 통일의 효과와 가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통일담론과 통일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종사하는 학자들이 주도를 했고,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통일의 정치·경제·사회적 효과와 가치에 대한 논의로 국한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통일 대박의 “대박”을 “편익(便益: Profit)”의 개념으로 재규정해서 통일이 한국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 편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진되었다는 것이다(조한범 외 2015).¹⁾

1) 조한범 외(2015)는 임금과 이자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을 살펴보면 통일로 인한 변화가 북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며, 대북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북한 지역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경우 남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남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준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을 달성할 경우 북한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이러한 경제적 편익 관점의 통일 담론은 그 동안 한국사회의 통일담론이 주로 “민족적 당위성”과 “안보이익”의 관점에서 진행되었고 이러한 전통적 통일담론을 초월했다는 데서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림 1 참고). 구세대일수록 통일을 당연히 이뤄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남한에서 사는 사람이나 북한에서 사는 사람 모두 다 같은 한(韓)민족인데 불행한 세계사 때문에 분단되어 살게 되었고, 따라서 통일을 이룩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같은 민족이 한반도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민족적 당위성만 강조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했다. 우선 통일의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텐데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겨났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양극화의 경제구조에서 구직난에 시달리며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통일비용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분단 관리가 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통일 대박론은 역발상적으로 통일이 되면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어 우리에게 편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논리를 설득하여 통일에 회의적이었던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의 경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통일이 완료되는 2055년경에는 통일한국의 GDP가 8.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통일 전 남한 GDP의 약 1.7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가 벌써 몇 년째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 분명히 경제적 돌파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로 인한 단기적인 경제적 불안정성은 피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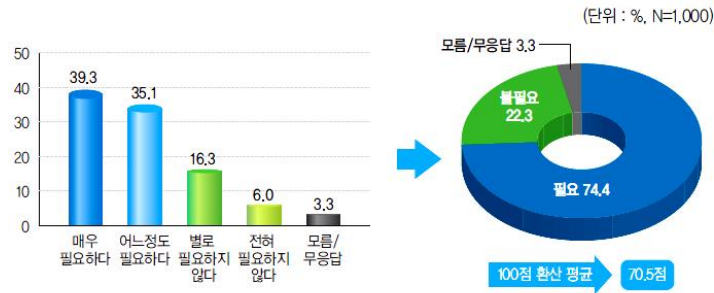
하지만 통일 대박론 이후 통일의 효과와 가치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물질적” 가치에만 중점을 두며 진행된 경향이 발생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통일의 효과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 위주로만 진행이 되었으며, 무형적이고 비물질적인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통일의 효과는 물질적인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고, 그 긍정적 파급효과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그리고 지구촌까지 확산 될 것이다.

1. 통일의 물질적 편익과 비물질적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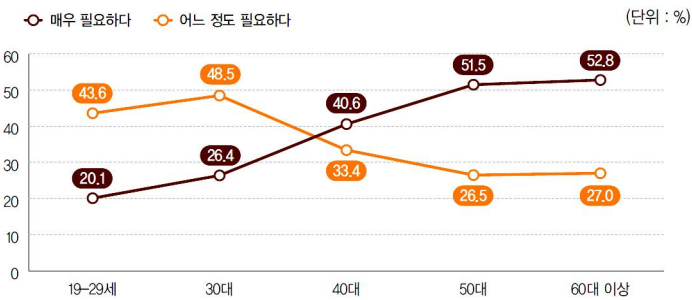
물론 한반도 통일의 물리적 편익, 즉 안보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동북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지지를 도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우선 다음과 같은 안보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분단관리에 소요되었던 제반 비용을 보다 생산적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북아에서 가장 위중했던 북한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권오덕 1996; 박영호 2005). 통일의 경제적 편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 전체 응답자의 74.4%가 '필요하다'고 응답,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2.3%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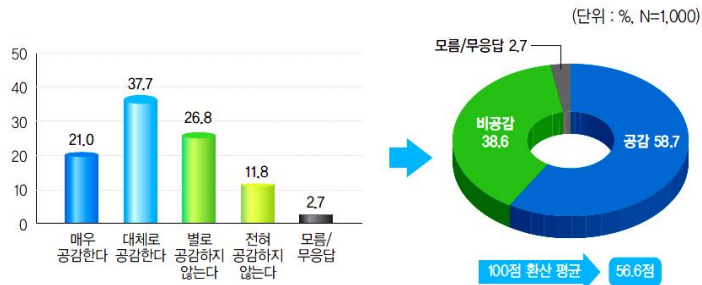


2) 통일 필요성의 차이는 세대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②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58.7%가 긍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38.6%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조사



출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16), 2016년 2분기 통일여론보고서

[그림 1]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한반도 통일의 인류 보편적 가치: 편익(便益) 위주의 담론을 넘어서 101

우선 남북한을 아우르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최근 수출의 부진을 내수 진작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천연자원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 보다 완전한 국가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한민국은 사실 동북아에서 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만약 남북이 연결되면 육로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게 접근이 용이해 지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박명규 외 2012; 조민 2006).

통일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물질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 온 경향은 이러한 논의를 사회과학 분야가 독점해 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인문학 분야에서도 통일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여 진행해 왔고,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통일이 초래할 물질적 편익에만 치중해 진행되어 왔던 논의와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09년 발족된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통일담론이 정치·경제 체제의 제도적 통합 방법과 이러한 통합의 물질적 가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허명철 2012). 최근 인문학 분야의 통일담론은 사회과학에서 강조해온 정치·경제의 제도적 통합과 편익 외에 주로 사회적·정신적 통합과 비물질적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의 트라우마(trauma)를 극복하고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데 도움을 주는 가치와 비전을 역사·철학·문학·예술 등의 분야에 치중해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시도는 분명히 통일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는 단

초가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효과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정교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 학제간(學際間) 협업의 필요성

인문학 분야에서 통일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도 기존의 통일담론이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로 나뉘어 형성되어 온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단을 극복하고 협업적 시각에서 통일의 가치를 논해볼 필요가 있다. 즉,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장점을 취사선택하고 “총괄적(holistic)” 접근법을 활용하여 일부 학문 분야가 통일연구를 독점해 온 경향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Wendt 1987).²⁾ 사회과학과 인문학 등 여러 학문분야가 참여하여 통일의 지향점과 방법론을 고민하는 학풍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담론의 지역적·기능적 범위를 확장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효과는 안보와 경제이익과 같은 물질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인류보편적인 가치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재적 가치를 띠는 세계사적 이벤트가 될 것이다.

2) 사안의 분석에 있어서 “나무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숲을 먼저 보느냐”의 문제에 해당한다. 개체주의적 접근법(individualistic approach) 또는 원자주의적 접근법(atomistic perspective)이 나무를 먼저 보고 개인단위의 개별적 분석을 우선시 하는데 비해, 총괄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은 숲을 먼저 보고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분석을 우선시 한다.

Ⅲ. 통일 가치 논의의 대상과 범위 확장 필요성

1. 통일 가치 논의의 민족주의적 시각 극복

최근 통일의 인문학적 논의는 통일의 비물질적 가치를 연구하여 보다 전향적이고 세련된 통일담론을 형성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주로 한반도를 영위하고 있는 한민족을 분석 단위로 하고 있어 다소 민족주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1994년 탄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여전히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남궁영 2001).³⁾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 당시 탄생했지만 그 후 역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역할을 해왔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기울였기 때문에, 여와 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그러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과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도 계승해 온 통일방안인 것은 분명하다. 1994년 탄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민족공동체의 회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27만 다문화 가정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과연 한민족만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통일국가의 비전은 다소 시대착오적이고 할 수 있다 (그림 2 참고). 또한 민족공동체를 앞에 내세우고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통일방안은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이기동 2014).⁴⁾ 물론 통일은 한(韓) 민족이 자주

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천명하고 있는 “자주·평화·민주” 3대 통일 원칙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제시하는 통일의 비전은 다문화 국가화 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한(韓) 민족이 주도를 하지만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지지 역시 유도할 수 있는 통일의 청사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소 이기적일 수 있는 “집체적(集體的)” 민족주의의 시각을 극복하고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통일 담론을 추구해야 한다(Risse 2002).⁵⁾

2. 국제사회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통일

실제로 통일한국은 한민족만의 안보위협 제거와 경제적 번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일에 의한 한반도 신(新)국가 건설이 한반도에서 삶을 영위하는 구성원이나 한민족에게만 국한된 이벤트(event)가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개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3 참고). 즉, 통일의 의미를 지정학적 경성권력(hard power) 증감(增減)의 관점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공공재와 같이 작용할 것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총론적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Nye 1990).⁶⁾ 통일의 국제 공공재적 가치는 한반도의 새로운 행복공동체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집체적인 정체성과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는 리스(Risse 2002)를 참고.

6) 나이(Nye 1990)는 변화하는 국제관계에서는 경성권력보다 연성권력(softpower)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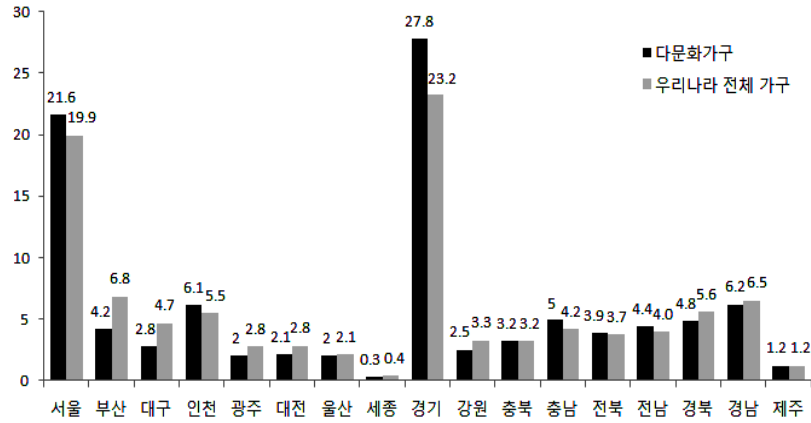
3)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평가는 남궁영(2001) 참고.

4) 이기동(2014)은 변화하는 통일환경으로 인해 민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2015년 278,036가구로 추정되며, 2012년에 비해 4.3%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27.8%, 서울 21.6%, 인천 6.1% 등 수도권에 전국 다문화가족의 55.5%가 거주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음.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는 82,476명으로 2012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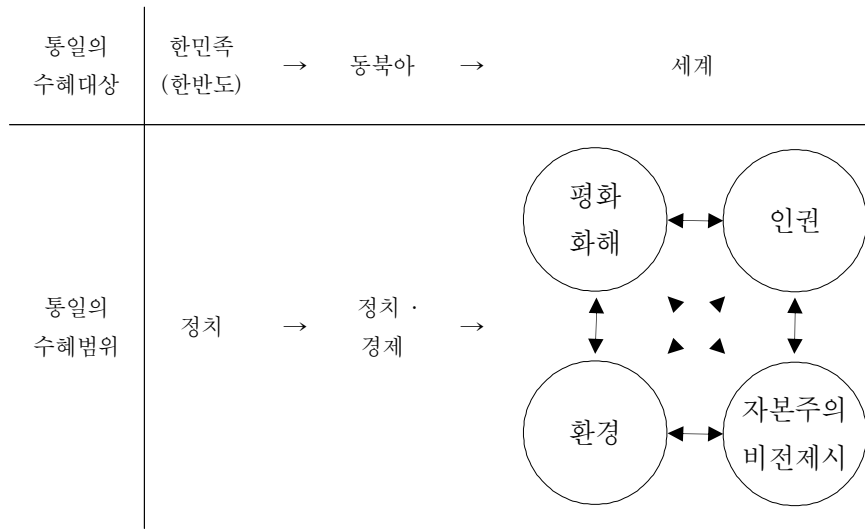
[2015년 다문화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04.25.)

[그림 2] 한국의 다문화가구 수



[그림 3] 통일의 수혜대상과 수혜범위의 확장

IV. 통일의 국제 공공재적 인류 보편적 가치

1. 국제분쟁·화해의 역사와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가치

한반도 통일은 우선 국제분쟁과 화해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 사건이 될 것이다. 냉전 이후 자유주의 정치·경제제도의 확산으로 고질적인 분쟁이 해결되고 통합의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는 분쟁의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경향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 카슈미르 지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다르푸르(Darfur)의 비극이라고 알려진 수단 분쟁, 그리고 시리아 내전 등은 분쟁 당사국들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구동회 외 2010).⁷⁾ 한반도 역시 20세기 중반부터 세계적인 분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상과는 무관해 보이는 고질적 분쟁 상황은 세계화가 진행되어 국경의 개념이 약해진 작금의 상황에서 국지적인 문제에서 국

제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 시리아 내전이 야기한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난민사태가 발생해 이는 유럽의 안보상황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국경의 문을 다시 높이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한반도의 분쟁 역시 남과 북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동시에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반도의 분쟁 상황이 미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를 협력보다 경쟁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성과도 직결되어 있다(김재천 2016).

고질적인 국제분쟁은 카슈미르 분쟁과 같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분쟁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고, 발칸의 분쟁과 같이 민족적인 정체성의 차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구분이고 대부분의 고질적인 분쟁은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인한 분리 또는 통합의 문제가 영토 내지는 여타 물질적인 자원에 대한 갈등으로 표출되어 정체성의 문제와 자원에 대한 갈등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분쟁 역시 민족적 정체성과 영토에 대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의 고질적 갈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질적 국제 분쟁지역은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다양한 문제들이 난마(亂麻)처럼 얽혀 있어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인류의 노력여하와 상관없이 국제관계에서 분쟁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파하고 있다(Waltz 1979).⁸⁾ 따라서 분쟁의 고착화는 현실주의의 국

7) “세계의 분쟁”은 분쟁의 배경과 원인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인종·민족·종교·영유권 등과 같은 자국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쟁’으로 시작된 각각의 사건들이 사실 그 이면에는 강자와 약자의 논리, 다수와 소수의 논리가 깔려 있는 ‘전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동티모르의 산타크루즈 대학살이나 발칸 반도 세르비아의 코소보 사태, 르완다에서 일어난 투치족과 후투족의 대립 등 다양한 분쟁을 보여주고 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439208)

8)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의 대표적인 예는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의 Theory of

제관계 이론의 매우 부정적인 현실인식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분쟁을 당연시하는 시각을 장려하고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은 아시아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분쟁을 해결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고질적인 분쟁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노력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중재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고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역사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분쟁사(分爭史)에서 한반도 통일은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고질적인 분쟁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思考)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분쟁해결에 대한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국제사회의 인식은 분명 국제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에 긍정적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통일정책이 타민족의 합당한 이익을 배척하는 이기적인 “집체적 민족주의”를 지양하고 타민족·타국가와 공생·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구현에 기반을 뒀야 한다. 공생·공존의 신통일 국가를 창출했을 경우에 통일은 국제사회에 국제 공공재적 가치를 제공하고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통일이 유럽과 국제사회에 제공한 공공재적 가치를 검토해 봐야 하고,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국가가치와 비전을 구체화 해 봐야 한다.

Interactional Relations이다. 윌츠는 상위의 권위체가 없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아래서 각 국가는 생존을 위해 자조(self-help)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자조” 행위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2. 국제 비확산 체제와 비핵화 통일국가 건설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을 위한 기술, 물질, 인력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초기 비확산 체제는 강대국 간의 핵무기 경쟁을 제어하고 핵무기가 수평적으로 다른 국가에게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했다. 비확산 체제의 출범은 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의 기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1957년 발족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초기 비확산 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원자 에너지가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장려하지만, 평화적인 용도의 원자력이 군사적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자력 활동을 감찰(monitor) 받게 했다. 하지만 IAEA 회원국이었던 프랑스와 중국이 1960년과 1964년에 각각 핵무기를 개발했고, 보다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위해 국제사회는 핵비확산조약(NPT)을 1968년 체결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비확산조약이 초기 비확산 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거뒀다. 이에 국제사회는 다양한 비확산 기제를 발족했는데, 예를 들어 1974년에는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와 핵공급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을 발족해 비확산 대상 품목과 기술들을 명시화 했다 (김현지 2008).⁹⁾

초기의 핵확산체제가 국가간의 핵경쟁을 제어하고 핵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에 치중했다면, 근대 핵확산체제는 핵무기와 핵무기 개

9) 다양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대한 논의는 김현지 (2008) 참고.

발에 필요한 인력, 물질, 기술이 테러분자들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핵안보(Nuclear Security)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안전(Nuclear Safety)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2010년 출범해 4회에 걸쳐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핵안보와 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미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국가들 정상 간의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안보위협을 제어하기 위해서 구축된 핵확산체제가 핵이 핵테러와 핵사고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비확산은 더 이상 전통적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통 안보 문제화 되었고, 국제사회의 “규범”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박정은·구갑우 2012).¹⁰⁾

사실 북한의 핵문제는 대한민국만의 안보위협이 아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문제로만 인식한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북한이 소유한 핵무기와 시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핵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만약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사고가 북한에서 발생한다면, 관리의 취약성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또한 만약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정권이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경우, 핵무기와 핵물질이 테러분자들과 같이 전통적 억제개념으로 제어되지 않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에게 유출되는 상황도 발

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비핵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통일은 북한핵문제의 궁극적인 정치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통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낸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비핵화 한반도 통일은 이제는 국제 규범의 영역으로 진화한 비확산 체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국제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것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3. 국제인권과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가치

인권이라는 개념 역시 비확산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 일반화 될 수 있는 규범과 가치의 영역으로 발전되었다. 인권의 세계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화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인권을 서구의 일부 국가에만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국가들과 학문적 풍조는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화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비확산, 인권, 환경 등의 이슈영역을 국제 규범으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은 베스트팔렌(Westphalia) 조약으로 공식화된 국가 주권(sovereignty)의 우월적 위상이었다. 유럽에서 30년 전쟁을 마치고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배타적 주권을 인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후 국가 주권은 국제사회에서 다른 모든 규범과 원칙에 우선시되는 가장 상위의 규범과 원칙으로 작용해 왔다. 국가 주권의 철용성 같은 지위로 인해 인권의 개념을 국제화하여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와 시민들에게 적용시키려는 노력에 많은 제약이 발생했다. 국가 주권의 우월적 지위

10) 국제규범적 측면에서의 비확산체제에 대한 논의는 박정은·구갑우(2012) 참고.

와 함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와 미국 등 서구 국가의 인권보호 정책 역시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화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의 기치 하에 소말리아의 내전과 이라크 북부 지역 쿠르드 족 대량학살 상황에는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지만,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인종 학살과 리비아와 시리아의 내전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인권의 개념이 지역과 문화 그리고 시대 별로 다를 수 있음을 설교하고 이런 경우 선별적인 국제사회의 인권 개입은 여태껏 국제관계를 지탱했던 가장 상위의 규범, 국가 주권의 우월성을 손상시켜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권은 지역과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고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서 수호해야 하는 국제규범의 영역으로 발전했다. 급기야 유엔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의결로 주권국가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국가는 주권을 존중받을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선언했다. 유엔의 “보호책임원칙(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비록 전 인류의 인권 보호 의무가 국제법으로 규정된 규약이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의 영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시사해 준다. 유엔 결의안 1973호는 보호책임원칙에 의거하여 국제사회가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여 유린당하는 리비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했다(Evans and Sahnoun 2002).

북한의 인권 또한 북한이나 한반도만의 문

제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규범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북한인권법안을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통과 시켰다. 미국 정부는 2008년에 그 효력이 끝나는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여 2012년까지 연장하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재연장 했다. 인권은 이렇듯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세계화와 함께 진화해온 진보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일각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남북관계 관리차원에서 접근해,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당사국인 한국이 기권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일부 세력의 반대 때문에 국회가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고 난후 가결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비로소 2016년에야 의결되었다. 인권개선은 북한의 내부적 발전을 통해 스스로 이뤄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한국은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권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국제사회의 원조로 독재국가의 인권이 개선된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페널티를 부과했을 때 인권유린을 중단한 경우가 더 많다. 외부지원의 경우에도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내건 경우가 있고, 실질적인 성과도 도출할 수 있었다. 냉전 후 동유럽 구공산국가에 대한 지원도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했고, 이러한 헬싱키 프로세스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 12만 명에 가까운 정치사범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CR)의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의하면 북한의 비밀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보안부가 온갖 고문을 자행하고 있는데, 자백을 위해서는 성폭행, 강제낙태, 굶기 등 상상을 초월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2016년 발간된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보고서 역시 북한의 인권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적인 탄압과 언론통제가 거의 세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국가의 탄생을 지향하고 있다.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인권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는 국제인권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국제인권을 고양하는 국제사회의 공공재적 역할을 하며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4. 국제환경과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가치

환경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교란하고 전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새로운 안보위협 중의 하나이다. 한 둘의 강대국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직 국제사회의 공조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안보(人間安保: human security)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무분별한 벌목과 화석연료의 사용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어 왔고, 환경 파괴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져 전인류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국제사회는 환경에 관련된 사안을 국가의 주권의 영역에서 점차 배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고, 환경보호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 레짐(regime)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환경의 국제공공재화 개념 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제어하기 위해 1997년 일본 교

토에서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議定書: Kyoto Protocol)를 탄생시켰다. 교토의정서 체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2009년 코펜하겐 기후협약회의를 거쳐 2015년 파리기후협약회의에서 COP21(Conference of the Parties)¹¹⁾ 체제를 출범시킴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COP21체제는 여태껏 선진국들만이 부담하고 있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의무를 모든 국가들이 저야함을 공표하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강제적인 감축이 아니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원칙에 의거해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환경 레짐의 발전과 변화는 환경의 문제가 이제 국가의 고유한 주권 영역에서 국제 사회의 규범의 영역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심각한 환경 파괴와 오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렇다 할 연료가 부족한 북한은 석탄을 과소비하고 있고 땀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분별한 벌목을 자행해 북한의 산은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 이밖에도 공장지대의 폐수와 폐광 방치로 인해 수질 오염 역시 심각하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면서 생물다양성이 상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된 데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환경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염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환경 개선은 통일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를 초월한 인

11) 21은 21번째로 열린 기후협약회의를 뜻하고 있다.

류공동의 과제이다. 한국은 민간차원에서 북한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아직 남과 북이 정부차원에서 환경협력의 방안을 마련해 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조림사업 등 환경사업이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지 못했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모든 남북 환경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북한 환경개선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한반도 통일이다. 통일 한국은 환경친화적(eco-friendly)인 한반도의 새로운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친환경 한반도 통일국가의 건설은 국제환경 레짐에 기여를 하는 국제사회의 공공재의 역할을 할 것이다.

5. 자본주의 4.0과 한반도 평화통일 2.0의 의미와 가치

2016년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프의 미대통령 당선에서 알 수 있듯이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하고 관리해온 자유주의 정치·경제의 국제질서는 한계에 도달한 것과 같은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세력들의 정치공세로만 인식하고 있던 부의 “양극화” 현상은 저개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의 정치·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주의 경제질서가 한계에 봉착한 징후는 벌써 포착되고 있었다. 인간의 자기의 추구 본능에 충실한 자본주의는 많은 부를 창출하는데 성공했지만 공동체적 관점에서 부의 효율적인 분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했다. 이에 “공동체 자유주의” 또는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칼레츠키(Kaletsky)는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주의의 위기를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극복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4.0” 모델을 제시했다(Anatole 2010).¹²⁾ 기존의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비전 논의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한반도의 확산이라는 “평화통일 1.0”이었다면 21세기 통일 비전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평화통일 2.0”을 지향한다. 평화통일 2.0은 북한체제의 변화뿐 아니라 한국의 기존 정치 경제 제도와 질서를 한 단계 진화시켜 통일 한반도의 자유주의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시장과 정부가 조화롭게 협력하여 기회와 평등·복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한반도의 행복공동체 건설의 성공은 남북의 진정한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자유주의 정치·경제 제도와 국제질서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평화통일 2.0의 비전으로 구축한 한반도의 새로운 행복공동체는 자유주의의 미래의 방향성 제시와 업그레이드 된 자유주의 제도의 실천으로 국제사회의 공공재적 역할을 한다.

V. 결론

통일대박론이 제기된 후 한반도 통일의 효과와 가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연구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통일의 정치·경제·사회적 효과와 가치에 대한 논의로 국한되었었다. 하지만 통일

12) 자본주의 4.0 세계관에 따르면, 시장의 힘과 경제지식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시장과 정부는 모두 불완전하며 오류를 범하기 쉬운 존재이다. 정치에서 민주적 경쟁은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자본주의는 구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연성이 높은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의 효과와 가치 논의가 “물질적” 가치, 즉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 위주로만 진행이 되었으며, 무형적인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인문학의 통일연구는 사회과학적 통일담론이 정치·경제 체제의 제도적 통합 방법과 이러한 통합의 가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의 트라우마(trauma)를 극복하고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데 도움을 주는 가치와 비전을 역사·철학·문학·예술 등을 통해 탐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족을 단위로만 하여 통일을 연구하는 편향성을 노정하기도 했다. 본 논문은 통일연구가 사회과학·인문학 분단 현상을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민족만을 단위로 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한다. 이기적인 집체적 민족주의의 시각을 극복하고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통일 담론을 추구해야 한다. 통일에 의한 한반도 신국가 건설이 한반도에서 삶을 영위하는 구성원이나 한민족에게만 국한된 이벤트(event)가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곳곳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다. 한반도 통일은 국제분쟁과 화해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 사건이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국제이슈가 되었다.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지만, 북한 인권은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다. 통일로 인한 북한 인권의 확충과 시민권의 확장은 국제사회의 공공재적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국가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금강산관광과 비무장지대(DMZ)를 연결하는 국제평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노력은 평화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통일한국의 국제적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

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또한 위기에 처한 자유주의 정치·경제 제도와 국제질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통일의 국제 공공재적 가치의 연구와 활용은 그 동안 물질적 편익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던 통일의 가치 연구를 비물질적인 분야로 확장시키고 담론의 지역적 대상을 한반도에서 국제사회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4년 박근혜 전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이 제기되고 같은 해 7월 통일준비위원회가 창설되어 활동하면서 한국 사회에 형성된 적극적 통일담론은 그동안 한반도 정황의 안정적 관리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대북정책을 궤도 수정하여 목표지향적인 통일 정책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도 있다.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의 대상이 한반도와 동북아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지역적 한계를 노정했다. 통일의 비전도 안보와 경제의 물질적인 영역에만 치중되어 있는 경향도 표출되었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담론은 한국 정부의 통일공공외교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공헌할 것이다. 통일의 국제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활용은 통일의 외교기반 확충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도출하는 정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석학 통일인문학을 말한다』. 서울: 선인.
- 구동화·이정록·노혜정·임수진. 2010. 『세계의 분쟁』. 서울: 푸른길
- 권오덕. 1996. “21세기를 향하여: 바람직한 통일의 길”. 『통일연구논총』 5(2): 291-330.
- 김재천. 2016.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통일정책연구』 25(1): 1-23.
- 김현지. 2008. “전략물자의 국제 수출통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자율준수 체제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10(1): 349-371
- 남궁영. 200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평가 및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5(1): 125-148.
- 박명규·이근관·전재성·김병로·김병연. 2012. 『연성복합통일론』.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박영호. 2005.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PA 05-05. 서울: 통일연구원.
- 박정은·구갑우. 2012. “핵안보정상회의와 핵 없는 세상: 평화연구와 운동의 시각”. 『경제와 사회 통권』 94: 148-176.
- 이기동. 2014. “통일환경의 변화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국동북아논총』 71(0): 189-208.
- 조민. 2006.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통일정책연구』 15(1): 183-206.
- 조민. 2014. “통일비전과 통일담론의 확산: 통일의 새벽이 동터오는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CO 14-04. 서울: 통일연구원.
- 조한범·문외솔·송영훈·황선재.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 분야』. 서울: 통일연구원.
- 허명철. 2010. “민족적 시각에서 보는 통일담론”. 『통일인문학논총』 50: 303-320.

Non-Korean References

- Evans, Gareth and Mohamed Sahnoun. 2002.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Foreign Affairs* 81 (6): 99-110.
- Kaletsky, Anatole. 2010.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New York: Public Affairs.
- Nye, Joseph S. Jr. 1990. "The Changing Nature of World Pow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5 (2): 177-192.
- Risse, Thomas. 2002. *Nationalism and Collective Identities: Europe versus the Nation-State?* Basingstoke: Palgrave.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 Wendt, Alexander E. 1987.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3): 335-370.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o Han-beom, Moon Weh-sol, Song Young-hun, and Hwang Sun-jae. 2015. *The Costs and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Cho Min. 2006. "The Peace Economy Theory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Formation of Economic Commun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15 (1): 183-206.
- Cho Min. 2014. "Vision towards Reunification and Diffusion of Reunification Discourse: Is the Dawn of the Reunification Rising?"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CO 14-04.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m Hyun-ji.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an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0 (1): 349-371.
- Kim Jae-chun. 2016. "The Four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and the End of Strategic Patience: Tracing the US Policy Change toward the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5 (1): 1-23.
- Konkuk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2012. *Scholars Speak out of Humanities for Unification*. Seoul: Seonin.
- Koo Dong-hoe, Lee Jeong-rok, Roh Hye-Jeong, and Im Su-Jin. 2010. *Conflicts across the Globe*. Seoul: Purungil.
- Kwon Oh-deok. 1996. "Towards the 21st Century: A Desirable Way of Reunification."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5 (2): 291-330.
- Lee Gee-dong. 2014. "The Change of Unification Environment and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71 (0): 189-208.
- Nam Kung-young. 2004. "South Korea's Unification Formula: Evaluation and Conside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5 (1): 125-148.
- Park Jung-eun and Koo Kab-woo. 2012. "Nuclear Security Summit and a Nuclear-Free World: A Perspective of Peace Studies and Peace Movements." *Economy and Society* 94: 148-176.
- Park Myeong-gyu, Lee Keun-kwan, Jeon Jae-sung, Kim Byung-ro, and Kim Byung-yeon. 2012. *Flexible and Complex Unification*. Seou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Yeong-ho. 2005. "Construction of the Northeast Asia Peace Community and Peace Settlement in Korean Peninsul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PA 05-05.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Xu Ming Zhe. 2010. "Discuss Reunification under the Perspective of Ethnology."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50: 303-320.